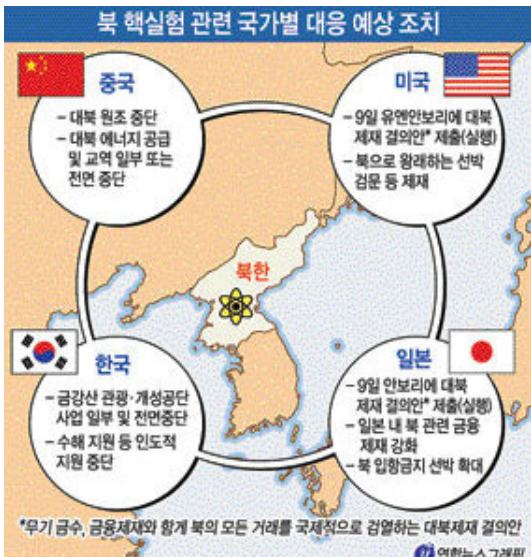


“외교적 해법 우선” 美 ‘레드라인’ 후퇴하나

미묘한 흐름 변화 핵사태 진정국면 가능성 中, 北·관련국에 “사태악화 말라” 경고

북한의 전격적인 핵실험 발표 이틀째를 맞는 10일 미묘한 흐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격양된 흥분을 자제하고 냉정하게 사태를 보려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먼저 워싱턴의 기류가 절제돼 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9일 오전(현지시간) 발표한 대북 성명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세계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유엔 안보리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하면서도 “미국은 외교적 해법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례적으로 발표된 성명에서 부시 대통령은 특히 북한에 대해 일종의 레드라인을 설정하는 듯한 표현을 구사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북한은 이란과 시리아에 대한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WMD) 기술 이전을 포함해 세계 최대의 WMD 확산 국가들 가운데 하나”라면서 “국가나 비 국가단체에 대한 북한의 핵무기와 핵물질의 이전은 미국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핵무기나 핵물질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레드라인(금지선)”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의 발언은 그동안 일반적으로 인식돼온 미국의 레드라인의 개념과는 다소 맥락이 달랐다.

대부분의 관측통들은 그동안 미국이 북한의 핵실험을 미국이 인내할 수 있는 한계, 즉 레드라인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부시 대통령의 발언을 근거로 볼 때 미국의 레드라인은 테러리스트들이나 이란, 시리아 등 ‘위험국가’에 대한 북한의 핵

물질과 미사일 이전임을 추론해볼 수 있다.

따라서 핵실험 단계에 머물고 있는 북한 핵사태의 경우 적어도 부시 대통령의 머리 속에는 ‘북한의 다음 단계의 행동’ 여하에 따라 ‘외교적 해법’이 적용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연결해볼 수 있다.

물론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을 응징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유엔 헌장 7장을 인용한 강력한 결의를 채택, 북한을 압박할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유엔 7장을 인용하더라도 경제제재 수준에서 더 나아가 무력제재까지 가능하도록 결의안을 격상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중국은 물론 유럽의 일부 이사국들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의 외교소식통은 “북한이 핵실험을 했지만 수십년간 폐쇄적인 자립경제를 유지해온 북한을 상대로 제재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북한의 핵실험 후 북한군의 군사동향과 향후 대북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에서 윤광웅 국방부장관과 주요 지휘관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결국 미국이 레드라인의 후퇴로까지 인식될 정도로 냉정한 대응을 보이는 것은 역설적으로 아직은 사태해결의 희망이 남아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레드라인을 넘을 경우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으로 무력사용이라는 최후의 카드가 거론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 점에서 미국이 ‘무력불사용’ 약속을 지키면서 압박은 하되 외교적인 사태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주목되는 것은 중국의 태도다. 후진타오(胡锦涛) 중국 국가주석은 이례적으로 북한 핵실험 사태에 대해 발언을 열었다. 후 주석은 북한에 대해 “더이상 사태를 악화시킬 행동을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부시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런 말을 했다. 그는 9일 밤 부시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관련국들이 지속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제어를 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을 피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살파 뒤돌아보면 핵실험 단계인 현상화

는 ‘제어할 수 있다’거나 ‘대화와 협상’이 적용될 수 있다는 뜻으로도 들린다.

이런 점에서 지난 3일 핵실험을 선언했던 북한 외무성의 성명내용이 새삼 주목된다.

당시 성명은 ‘미국의 핵전쟁 위협과 제재 압력 책동’으로 핵실험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당위성을 들어 ‘안전성을 담보로 한 핵실험’을 예고하면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절대로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핵무기를 통한 위협과 핵이전을 철저히 불허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처럼 북한 스스로 핵이전을 절대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은 부시 대통령의 레드라인 설정과 연결해볼 때 무시할 수 없는 의미를 지닌다.

결과 상황을 종합해보면 일단 핵실험의 충격파가 가시지 않은 만큼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것과 별도로 사태가 급속도로 진정될 가능성도 상존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日 ‘핵무장’ 논의 꿈틀

北 핵공격 위기감 고조... 선제공격 능력 보유 제기

북한의 핵실험 성공 발표로 일본의 북한 핵 공격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핵실험의 진위를 규명하기 위해 정보 수집과 분석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 북한을 고립시키기위한 국제적인 연대 및 독자적인 추가 제재조치에 대한 검토를 서두르고 있다.

핵실험이 실제로 판명될 경우에는 신속한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에서도 여야당 합의로 북한의 핵실험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시오자키 야스히사(齋藤 嘉久) 관방장관은 9일 발표한 정부 성명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일본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하면서 “결코 용인할 수 없으며, 신속하게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와 국민들이 북한의 이번 핵실험에 대해 느끼는 위기감은 심각하다. 북한이 그동안 실험한 미사일 발사에 이는 핵실험이라는 점에서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경우 일본 전역이 핵 공격권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앞으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처하기위해 방위태세를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방위청의 한 간부도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이 되면 일본의 안전보장이 중대한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며 방위체제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북한은 이미 일본의 거의 전역을 사정에 넣을 수 있는 노동 미사일(사정 1천300km)을 약 200기 배치하고 있다. 노동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탄두의 중량은 약 1톤으로, 북한은 앞으로 탄두를 소형화하는 기술을 개발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방위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일본에서는 지난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 자위대가 북한내 미사일 기지를 공격하는 ‘선제공격능력’을 보유해야한다는 주장이 정부·여당내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당시 주변국의 경계와 헌법에 저촉된다는 지적 등으로 잠잠해졌지만, 이번 핵실험을 계기로 재연될 공산이 크다.

또한 핵무장을 서둘러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공공연히 나올 가능성도 있다.

최근에는 일본 정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일본 총리가 회장으로 있는 세계평화연구소가 국제사회의 상황 변화에 대비해 일본의 핵무장화를 연구해야 한다는 제안을 발표한 바 있다.

보수·우경화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는 이시하라 신타로(石原 慎太郎) 도쿄도 지사도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핵무장을 촉구하는 신문 칼럼을 기고하는 등 일본에서 핵무장 주장이 서서히 표면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도쿄·연합뉴스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10일 “북한이 9일 핵실험을 함으로써 북미 양자대화의 가능성이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주한 미대사관 청사 집무실에서 국내 언론과 가진 회견에서 이 같이 말한 뒤 “북한은 한미간에 북핵교착 상황을 푸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음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핵실험을 했

“북미 양자대화 가능성 더욱 어려워져”

기 때문에 북의 핵실험은 우리의 제안에 관심이 없음을 자기 스타일로 표현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핵실험 이후 한국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관련 활동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조만간 로버트 조지프 국무부 군축·국제안보담당 차관이 방한하면 한국의 PSI(정식) 참가에 대한 협조 논의도 분명히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어 유엔 안보리가 유엔 헌장7장을 인용한 대북 결의 채택을 논의 중인 것과 관련, “헌장 7장이 인용된다고 해서 군사적 조치를 바로 이행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번 유엔 결의 내용은 경제제재 조치가 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어 북한 핵실험 이후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 사업의 향배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한국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 지 추측하지는 않지만 현 상황에서 모든 정부는 북한 정권에 혜택을 주는 모든 지원 프로그램을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 논의가 연기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아직 전시 작전 통제권 이전 시기는 한미간에 합의돼 있지 않은데 그 시기에 대한 합의가 조만간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연합뉴스

中, 北국경 단둥세관 10일 폐쇄

북한의 핵실험 성공 발표 하루 만인 10일 중국과 북한 간 세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중국의 라오닝(遼寧)성 단둥(丹東)해관이 10일 문을 닫았다.

단둥해관은 이날이 북한의 노동당 창건 61돌 기념일이란 점을 일단 휴업의 이유로 내세웠다. 그러나 단둥해관의 휴업은 북한 핵실험에 대한 중국 측의 제재 조치의 일환일 수도 있어 11일에도 문을 닫을 지 여부가 주목된다.

단둥해관은 중국과 북한 사이에서 이뤄지는 교역량의 약 80%가 오가는 곳으로 중국이나 북한의 명절이나 기념일에 잠시 운영을 중단하고 문을 닫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단둥과 선양의 대북소식통들은 이날 “현재까지 별다른 움직임은 나타나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여론이 고조될 경우 중국이 조만간 해관을 폐쇄하고 북한을 압박하는 제재 조치가 착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따라서 중국 측이 명목상 북한 노동당 창건 61돌 기념일이라는 이유로 하루 해관 운영을 중단했지만 11일 다시 문을 열 것인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선양과 단둥에서 대북무역에 종사하는 기업인들은 북한의 핵실험이 향후 사업에 어떤 파장을 미칠 지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였다.

/단둥·연합뉴스

매일밤 8시부터 쏠! 쏠! 쏠! 애들은가라!!



김범룡

10월 11, 12일



면승엽

10월 16, 17일



민해경

10월 19, 20일



김수희

10월 26, 27일

부킹천국 100%

광주 상무나이트

(상무지구 롯데마트 옆)